

## 연금시장리뷰 47호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첨부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김동열 수석연구위원(02-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 ■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약8%p 감소하고 가계수지는 악화되는 등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커짐에 따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중산층의 구성, 소득과 소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 ■ 1990년 이후 중산층의 변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산층의 대표 가구가 변했다.** 1990년의 대표적인 중산층은 “30대-고졸-제조업-남성 외벌이” 였으나, 2010년 “40대-대졸-서비스업-남녀 맞벌이” 로 변화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7.5세에서 47세로, 맞벌이 비중은 15%에서 37%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1.6%에서 16.4%로 증가했다.

**둘째,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졌으며, 중산층 가계수지 흑자액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흑자율)은 1990년 22.0%에서 2010년 17.9%로 낮아졌다. 이는 비소비지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처분가능소득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산층의 소득 구성이 변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경상소득 가운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에서 2010년 10.2%로 크게 증가했다.

**넷째, 중산층의 경직성 지출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의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비중은 3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증가했다.

**다섯째, 소비여력의 감소에 따라 중산층은 선택적 지출을 줄였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락/문화비의 비중이 1990년 4.3%에서 2010년 4.1%로 감소했으며,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은 2000년 10.1%에서 2010년 10.1%로 변화가 없었다.

#### ■ 시사점 및 과제

위와 같이 **위축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급증한 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산**시키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미래의 부담을 예측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정책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증한 준조세 부담(연금, 건강보험 등)을 감안하여 **각종 사회보험료의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급증한 통신비 부담의 감축**을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활성화**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소득 3배 증가 중산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년간 1인당GDP는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약8%p 감소했음</li> <li>-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1990, 2000, 2010년 분석</li> <li>· 2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함</li> </ul>

1990년 이후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대표가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중산층: 서비스업 종사, 40대 후반, 대졸, 남녀 맞벌이 가구</li> <li>· 1990년 중산층: 제조업 종사, 30대 후반, 고졸, 남성 외벌이 가구</li> </ul>
적자가구 증가 (흑자율 하락)	-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가계수지 흑자율은 2010년 17.9%로 1990년 수준(22.0%)을 밀돌고 있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감소	- 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반영되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제도 정비에 따라 이 전소득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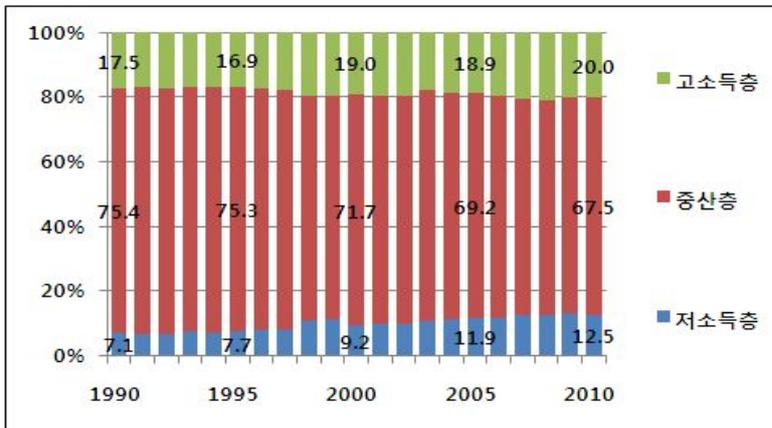
경직성 지출 급증	부채상환 3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하여 30%에 육박함</li> <li>· 1990년 10.4%, 2000년 13.6%, 2010년 27.5%로 20년간 3배가량 급증</li> </ul>
	준조세 3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지출 비중이 20년간 3배 이상 급증함</li> <li>· 1990년 1.7%에서 2010년 5.8%로 3배 이상 증가</li> </ul>
	사교육비 2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산층의 부담이 급증</li> <li>· 1990년 2.1%에서 2010년 6.0%로 3배 이상 급증</li> </ul>
	통신비 3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과 무선전화 보급에 따라 통신비 지출 비중이 3배가량 급증</li> <li>· 1990년 1.7%에서 2010년 5.0%로 3배가량 증가</li> </ul>
선택적 지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락, 문화, 여행, 외식 등 선택적 지출의 비중이 줄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부진으로 이어짐</li> <li>· 오락문화비 비중이 2000년 4.7%에서 2010년 4.1%로 감소</li> </ul>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및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축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li> <li>· 가계부채 부담의 장기화, 분산화, 예측가능화를 위한 정책 지원</li> <li>· 급증한 준조세 부담(연금, 건강보험 등)의 추가 상승은 신중해야</li> <li>·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및 관련 투자 확대</li> <li>· 통신비 부담 감축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시장경쟁 활성화</li> </ul>

## 1.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 (중산층 비중의 감소) 지난 20년간 1인당GDP는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중산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산층의 가계수지는 악화되고 있음
  - 중산층이란 중위소득<sup>2)</sup>의 50% 이상 150% 이하의 소득계층을 지칭하며, 지난 1990년 75.4%이던 중산층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74.1%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0년 현재 67.5%를 기록<sup>3)</sup>)

< 중산층 비중의 감소 >



< 소득계층의 구분 >

구분	기준
고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초과 가구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주: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  
가처분소득 기준

주: 소득분배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정의를 활용함

- (연구 배경과 방법) 최근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여론<sup>4)</sup>이 커짐에 따라,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sup>5)</sup>를 이용, 중산층의 가계수지와 가구주의 특성, 소비구조 변화 등을 분석한 후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중산층 가계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서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관된 시계열분석을 위해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특성, 소득,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출구조 등을 분석함

1) 1990년 1인당 명목 GDP가 6,303달러에서 2010년 20,165달러로 증가하여,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함  
 2) 1990년부터 시계열분석을 위해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구하고,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을 분류. 여기서, 균등화란 가구원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차감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것임  
 3) 2008년 66.3%에서 2010년 67.5%로 중산층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반등인지 또는 추세 전환인지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함  
 4) 파이낸셜타임즈(FT, 2011.6.27), 헤럴드경제신문(6.28), 중앙일보(7.2) 등에서 중산층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음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신분류', '연간' 마이크로데이터(<http://mdss.kostat.go.kr/mdssexst/>)를 활용함

## 2. 1990년 이후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 중산층 대표 가구 변화: 1990년 “30대-고졸-제조업 근무-남성 외벌이”에서, 2010년 “40대-대졸-서비스업 근무-남녀 맞벌이”로 변화

○ (고학력, 맞벌이, 여성 가구주 증가) 지난 20여년간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계수지<sup>6)</sup>는 나빠졌지만, 중산층 가구 가운데 고학력, 맞벌이, 여성, 무직 가구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990년 15.0%였던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2010년 37.0%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졸이상** 가구주 비율도 1990년 19.1%에서 2010년 40.0%로 대폭 증가
-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1990년 11.6%에서 2010년 16.4%로 증가
- ‘여성-맞벌이’ 가구주의 비율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성-외벌이’로서는 중산층의 가계수지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sup>7)</sup>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 중산층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변화 >

	가구원 수 (명)	가구주 연령 (세)	가구주 학력 대졸 이상 (%)	맞벌이가구 비율 (%)	여성 가구주 비율 (%)	무직 가구주 비율 (%)
1990년	3.92	37.5	19.1	15.0	11.6	2.1
2000년	3.53	42.6	27.9	21.8	17.6	10.1
2010년	3.36	47.0	40.0	37.0	16.4	10.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 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추세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10세가량 증가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 가구주의 비율은 2배 이상 급등함
- 해방 이후의 활발한 사회적 이동과 대졸이상 가구주 비율의 급증은 한국사회의 역동성과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너무 높은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비 부담, 가계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도 초래함

6) 본문 4쪽 이후 중산층의 가계수지 변화를 참고

7) 미국의 경우에도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로 1970년대 후반에 맞벌이 비율이 남성-외벌이 비율을 추월함(이현송, 2008, 『미국 사회의 중간계층과 성역할 변화』, 『기रो에 선 중산층』)

○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증가)**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산업별<sup>8)</sup>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31.0%에서 2010년 17.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 가구주는 크게 증가함
  - 자영업을 대표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16.8%에서 2000년 23.2%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3년 이후 카드사태에 따른 내수부진과 구조조정으로 2010년 18.6%로 크게 후퇴함
  -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은 최근 업황의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다양화와 전문화, 고부가가치화**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분류가 세분화되었으며,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사업지원서비스/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비중이 1990년 27.9%였으나, 2010년에는 41.1%로 대폭 증가
  - 위와 같은 추세 속에서도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중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대형화 추세에 따라 2000년 2.9%에서 2010년 1.7%로 감소하고 있음

**< 중산층 가구주의 산업별 구성 추이 >**

(%)

연도	제조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부동산/용역			기타 서비스 (23.0)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	부동산	사업지원	사회/개인서비스		기타				
1990년	31.0	13.2	16.8		11.1	4.9			17.3		5.7				
2000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부동산/용역(11.5)			기타 서비스 (22.7)						
						금융	부동산	사업지원	행정	교육	복지	개인	기타		
2000년	22.5	10.6	18.2	5.0	9.6	2.9	8.6	3.1	2.7	1.2	4.7	11.0			
2010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방송/통신	금융/부동산/용역(10.8)			기타 서비스 (30.3)					
							금융	부동산	사업지원	행정	교육	복지	개인	과학기술	기타
2010년	17.8	11.1	13.5	5.1	9.5	2.1	1.7	2.9	6.2	3.1	3.0	2.3	5.6	3.3	13.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기타'에는 농림어업/광업/전기가스수도업/분류 불능업 등이 포함

8) **산업별 분류**는 2005년 이후부터 과거 분류에 비해 굉장히 세분화된 **제9차 계정**이 적용되고 있어, 1990년 분류 및 2000년 분류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룹별로 통합하여 비교할 수밖에 없었음

**(2) 중산층 적자가구 증가: 적자가구 비중 증가, 흑자율 하락**

○ (적자가구 증가)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은 2010년 23.3%로서, 2000년의 24.2%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으나, 1990년의 15.8%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중산층 가구의 2010년 가계수지 흑자율은 1990년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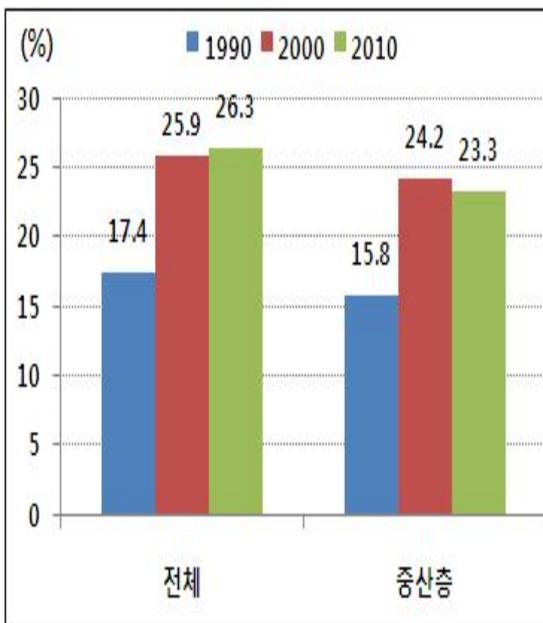
- 고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1990년 11.7%에서 2010년 8.9%로 감소했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1990년 수준보다 증가함(별첨4)

- (흑자율 하락) 중산층 가구의 흑자율<sup>9)</sup>은 2010년 17.9%로서 2000년의 15.6%보다는 향상되었으나, 1990년의 22.0% 수준에는 못 미치며, 고소득층과의 흑자율 격차는 벌어지고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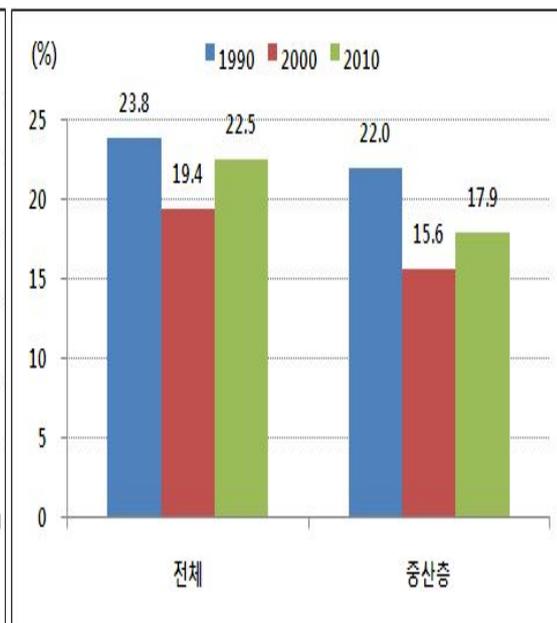
· 고소득층의 흑자율은 2010년 35.0%로서 1990년 30.3%보다 좋아짐(별첨3)

· 중산층의 적자가구 증가와 흑자율 하락은 부채상환, 세금, 교육비, 통신비 등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가계수지가 악화한 것에 기인함

< 적자가구 비중 추이 >



< 가계수지 흑자율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 가구 기준, 흑자율=(가계수지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적자가구는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이 마이너스(-)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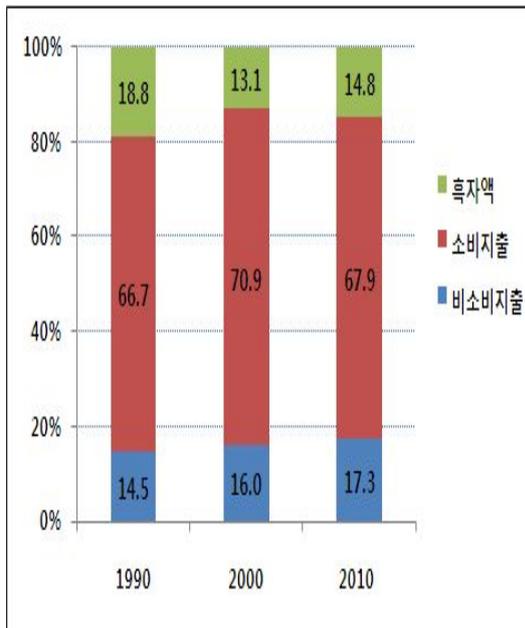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9) 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가계의 저축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

○ (처분가능소득 위축, 비소비지출<sup>10</sup> 증가) 지난 20년동안 총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990년 총소득의 85.5%에서 2010년 82.7%로 줄어들었음

- 총소득이 지난 20년동안 4.06배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1990년 677.2천원에서 2010년 2,659.9천원으로 3.9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5.5%에서 2010년 82.7%로 감소
- 처분가능소득의 위축을 초래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공적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1990년 114.6천원에서 556.1천원으로 4.85배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에서의 비중도 1990년 14.5%에서 2010년 17.3%로 크게 늘었음
- 앞에서 살펴본 가계수지 흑자액의 감소와 적자가구의 증가는 위와 같은 처분가능소득의 위축에 기인하는 바가 많음

< 중산층 소득의 구성비 >



< 중산층 소득의 규모와 증가 >

(단위: 원, 배)

연도	총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흑자액
1990 (A)	791,854	114,608	677,246	
			528,539	148,707
2000	1,905,677	304,790	1,600,887	
			1,350,785	250,103
2010 (B)	3,216,019	556,118	2,659,901	
			2,184,878	475,022
(B/A)	(4.06)	(4.85)	(3.93)	
			(4.13)	(3.1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주: 총소득(경상소득 + 비경상소득)대비 구성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괄호( ) 안의 수는 1990년 대비 배율

10) 비소비지출은 공적 비소비지출(근로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경상조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비경상조세, 연금, 건강보험 등)과 사적 비소비지출(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등)로 구성됨

### (3) 중산층 소득구성 변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감소, 이전소득 증가

○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감소, 이전소득 증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sup>11)</su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은 1990년 66.8%에서 2010년 65.6%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사업소득은 27.0%에서 21.2%로, 재산소득은 0.8%에서 0.3%로 감소함
- 이전소득의 비중이 5.4%에서 10.2%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여년간 연금과 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보장됨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 중산층의 경상소득 구성 비율 추이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합계
1990년	66.8	27.0	0.8	5.4	100.0
2000년	61.0	29.2	1.3	8.4	100.0
2010년	65.6	21.2	0.3	10.2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 가구 기준

- 중산층의 사업소득 비중이 2010년 크게 감소한 것은, 자영업주의 비중이 2000년 29.8%까지 늘었다가 2010년에 다시 17.1%로 감소한 것과 연결됨

#### < 중산층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sup>12)</sup> 구성 추이 >

(%)

	공무원	사무직 (임시, 일용등)	기능/상용 근로자	생산 (임시, 일용)	자영업주	개인 경영	법인 경영	자유업	무직 기타
1990년	6.9	14.8	42.1	6.2	23.1	2.1	0.1	0.4	4.3
2000년	3.4	17.1	29.9	7.0	29.8	1.7	0.5	0.5	10.1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2010년	42.5	14.5	5.8	7.4	17.1	0.1		1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1) 도시(2인 이상, 비농가) 가구 기준,

2) 종사상지위는 분류기준이 자주 변해 '자영업' 이외에는 지난 20년을 동시 비교하기 곤란

11) 이전소득에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세금 환급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과 가족간 상속과 증여 등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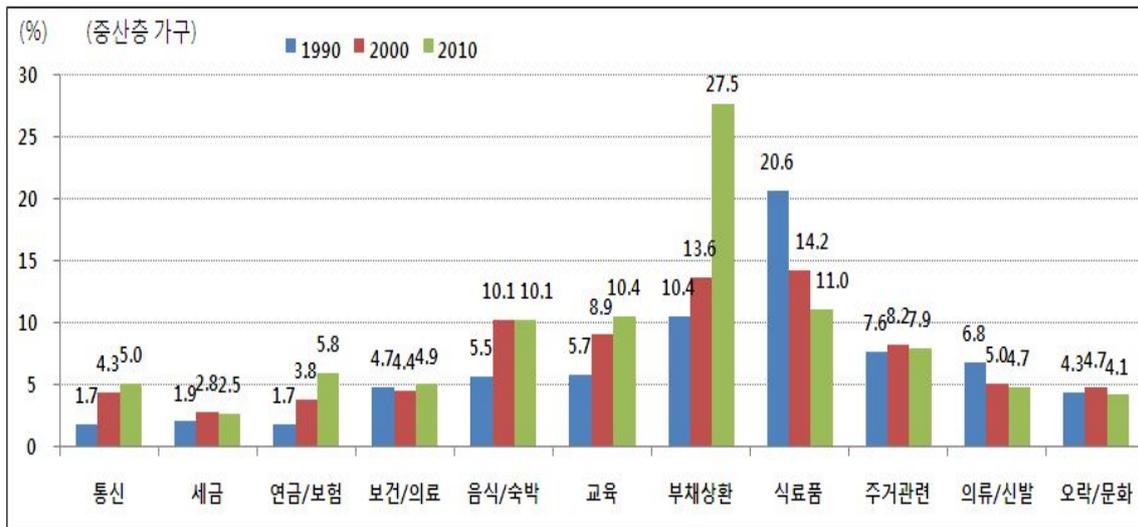
12)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2009년부터 과거와 완전히 다른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1990년 및 2000년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4) 경직성 지출의 급증<sup>13)</sup>: 부채상환액, 준조세, 사교육비, 통신비 급증**

○ (경직성 지출(채·세·교·통) 증가)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의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과 준조세, 사교육비, 통신비<sup>14)</sup> 지출 등 경직성 지출(채·세·교·통)은 크게 증가함

- 지난 20년 동안 가계부채, 할부금융 등의 증가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sup>15)</sup>의 비중이 3배가량 폭등했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과 통신비의 비중이 3배가량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함

**< 중산층 가구의 주요 지출항목 비중 변화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1)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 (2)가처분소득 대비 각 지출의 비중

- (부채상환 비율 30% 육박) 2010년도 중산층 가구의 부채상환액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27.5%에 달하며,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후 부담이 급증했다는 특징을 보임

- 소득분위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33.4%로서 가장 높는데, 이는 부채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소득층일수록 주택 구입과 내구재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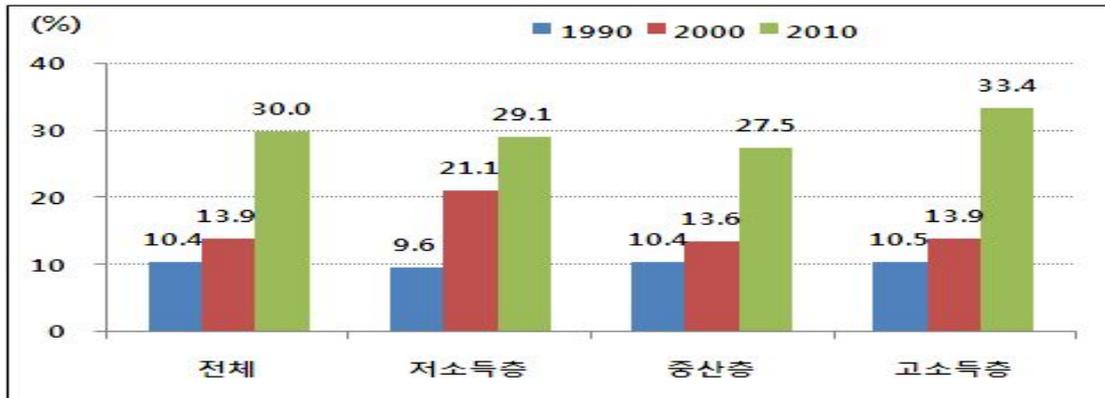
13) '소득 대비 지출의 비중'을 비교하는 기준 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을 활용했음. 가처분소득(=경상소득-경상조세-연금-사회보장-사회적헌물이전)에는 세금과 연금/보험(준조세)이 제외되었으므로, 조세와 준조세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며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14) 통신비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화 추세에 따라 경기 및 소득 변화와 무관한 경직성 지출로 굳어짐

15)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에는 부동산대출상환,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이 포함됨

- 시기별로 보면 특히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최근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와 연계되어 있음<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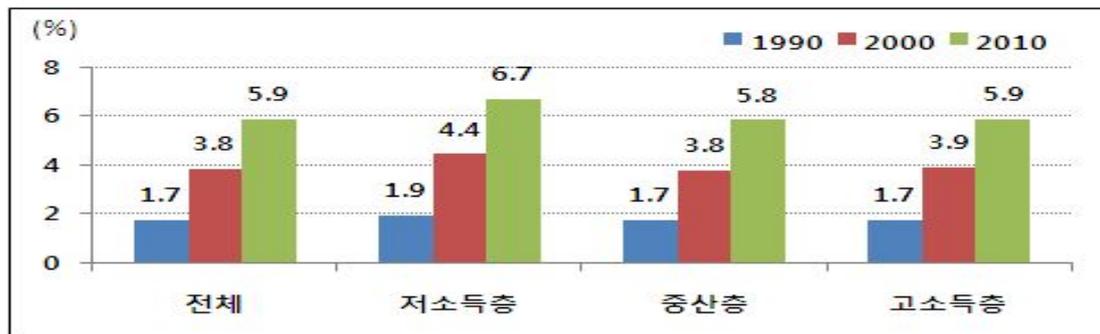
**< 부채상환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 (준조세 지출 3배 이상 급증) 1990년대에는 조세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보다 지출비중이 더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보강으로 2010년 현재 준조세지출의 비중이 조세지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 연금/보험 등 준조세 지출 비중이 중산층의 경우 1990년 1.7%에서 2010년 5.8%로 크게 증가함<sup>17)</sup>

**< 준조세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준조세는 공적 연금, 사회보험 포함

16) '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의 급증, 2000년대에는 부채상환 부담의 급증이 가계수지 악화와 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함  
17) 저소득층의 준조세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준조세 부담이 급증했다기보다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사교육비 3배가량 증가)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sup>18)</sup> 비중은 1990년 2.1%에서 2010년 6.0%로 3배가량 증가했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중산층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 2.1%에서 2010년 6.0%로 높아짐<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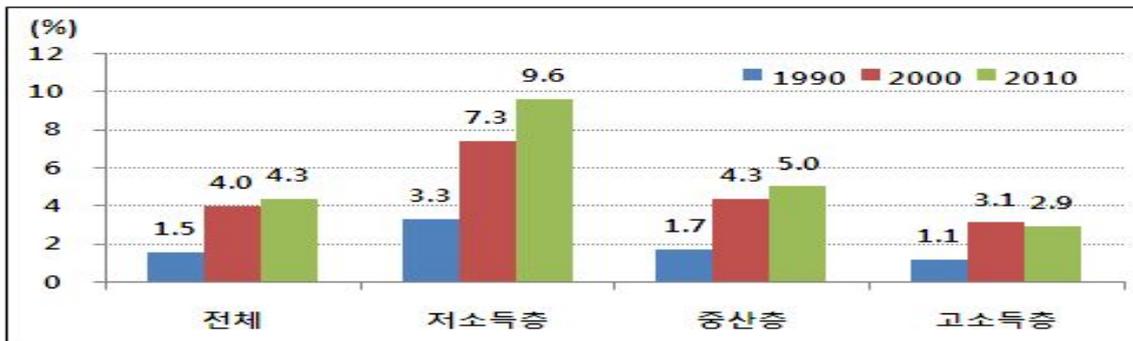
< 사교육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사교육=미성년 대상 학원 교습, 개인레슨 등

- (통신비 3배가량 증가) 무선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통신비용도 경직성이 높아졌으며, 통신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의 경우 1990년 1.7%에서 2010년 5.0%로 3배 가까이 급증했음
  -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신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지는 소득 역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2010년 통신비 비중이 9.6%인데 비해 중산층은 5.0%, 고소득층은 2.9%로 크게 낮아짐

< 통신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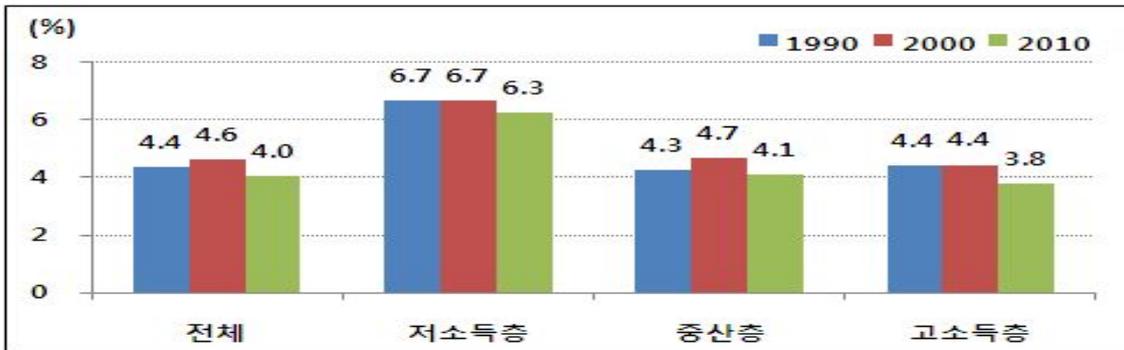
18) 높은 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대한상공회의소(2006))  
 19) 일본은 계층이동의 개방성이 저하되면 하층에 속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를 줄이는 유인 격차 (incentive divide) 현상이 발생(이종구, 2008, '일본의 중류 붕괴와 사회적 격차, 『기रो에 선 중산층』)했음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줄지 않고 있음

**(5) 선택적 지출의 감소: 오락, 문화, 여행, 문화, 외식 등 선택적 지출 감소**

○ (선택적 지출 감소) 중산층의 경직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응하여, 오락, 문화, 여행, 외식 등 불요불급한 선택적 지출의 비중을 줄이고 있음

- 중산층의 경우 호황기에 문화비 지출을 늘리고, 불황기에 지출을 줄이는 탄력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오락, 문화, 외식, 여행 등 불요불급한 선택적 지출의 비중을 줄이고 있음
- 오락/문화비 지출은 2000년 4.6%에서 2010년 4.0%로 하락했으며,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00년 대비 2010년의 오락/문화비 비중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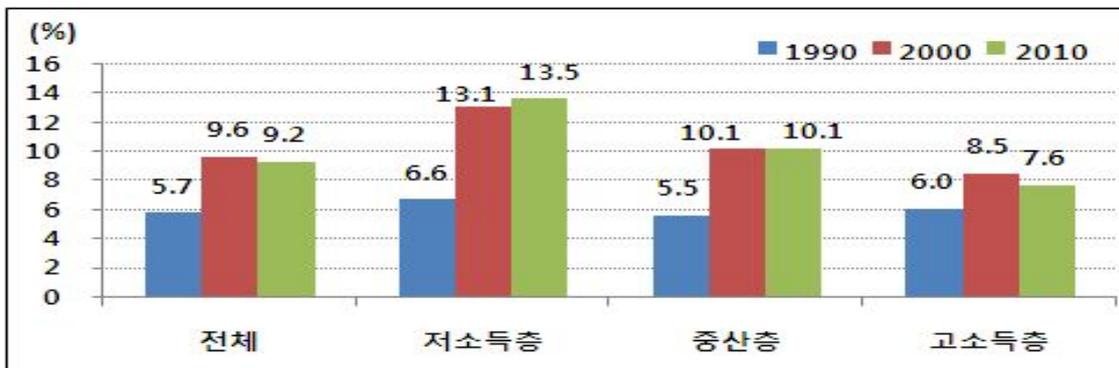
**< 오락/문화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 외식비를 포함하는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도 2000년 9.6%에서 2010년 9.2%로 감소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비중은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sup>20)</sup>을 드러냄

**< 음식/숙박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20) 저소득층의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낮음을 반영

### 3. 시사점과 과제

- 부채, 준조세, 교육, 통신 등 4가지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위축된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 분산화, 예측 가능화
    - 단기, 변동금리, 거치식, 일시상환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대출상품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함
  - 준조세 부담의 추가 상승을 최소화
    - 최근 크게 증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준조세)의 부담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보험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 투자의 확대
    - 특히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공교육 내실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통신시장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활성화
    - 지난 20년 3배가량 급증한 중산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진입규제와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좋은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계층하락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임
  - 금융, 법률,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한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로 일자리 비중이 전환하도록 지원함
  - 좋은 일자리가 내수 서비스업에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와 육성 정책이 필요함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dykim@hri.co.kr, 02-2072-6213)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SS), 1990, 2000, 20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강성진 외,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보건사회연구원, 2010

강신욱(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복지분야 발제문”, 2011.6.24

강신욱(2011),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이슈 앤 포커스 제93호, 보건사회연구원  
2011.7.1

남은영(2011), 『한국사회 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 나남

대한상공회의소(2006), “우리나라 가계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2006.3

박태일(1998), “IMF시대의 중산층 생활과 의식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1998

삼성경제연구소(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2010.8

이부형(2005), “일본 중산층의 붕괴와 격차사회 형성”, 현대경제연구원, 2005

주원(2009),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9.4.21

한국국제경제학회(201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1.6.8

한국사회학회 편(2008), 『기로에 선 중산층 -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 인간사  
랑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과제”, 2009

홍성민 민주홍(1999), “IMF시대의 중산층 약화 실태 및 재구축 방안”, 현대경제연  
구원, 1999

<별첨 1>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소비, 가구비중 추이

(단위: 원, %, 가구)

연도	구분	전체 가구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2010	총소득(원)	3,670,142	1,174,230	3,216,019	6,522,486
	처분가능소득(원)	2,983,795	951,211	2,659,901	5,180,302
	소비지출(원)	2,312,540	1,220,679	2,184,878	3,365,014
	흑자액(원)	671,255	-269,468	475,022	1,815,288
	흑자율(%)	22.5	-28.3	17.9	35.0
	평균소비성향(%)	77.5	128.3	82.1	65.0
2000	총소득(원)	2,220,775	658,956	1,905,677	3,968,520
	처분가능소득(원)	1,841,495	523,885	1,600,887	3,233,127
	소비지출(원)	1,483,852	765,446	1,350,785	2,248,791
	흑자액(원)	357,643	-241,561	250,103	984,336
	흑자율(%)	19.4	-46.1	15.6	30.4
	평균소비성향(%)	80.6	146.1	84.4	69.6
1990	총소득(원)	938,133	292,313	791,854	1,663,343
	처분가능소득(원)	791,699	243,916	677,246	1,372,249
	소비지출(원)	603,126	326,862	528,539	956,527
	흑자액(원)	188,573	-82,946	148,707	415,722
	흑자율(%)	23.8	-34.0	22.0	30.3
	평균소비성향(%)	76.2	134.0	78.0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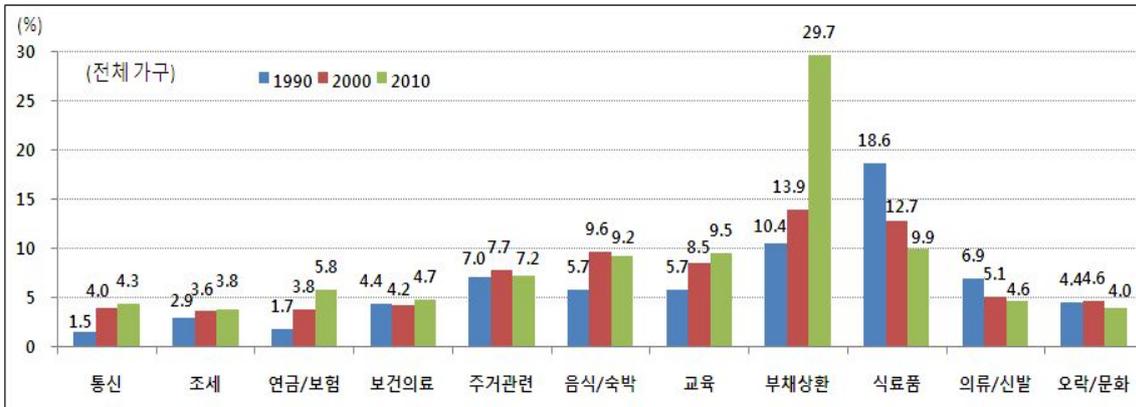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1)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2)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 소득,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3)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가계수지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별첨 2> 연도별 주요 지출 항목별 비중 추이 (전체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1)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 (2)가처분소득 대비 각 지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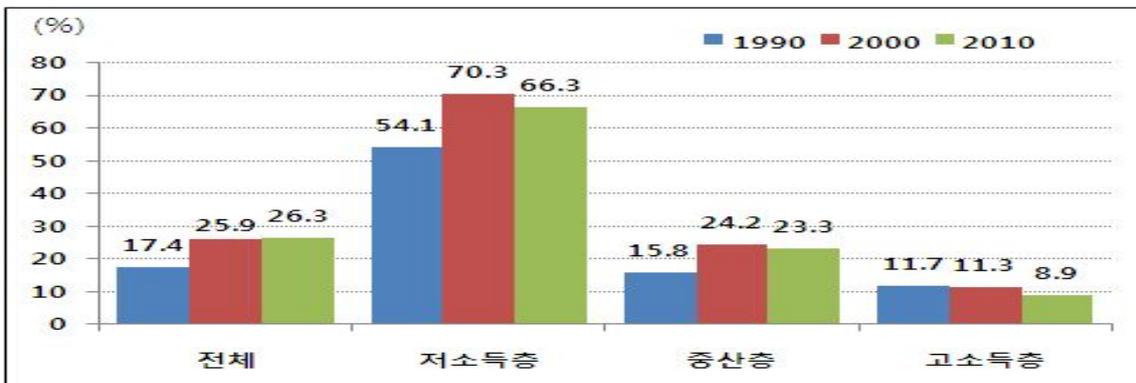
<별첨 3> 소득계층별 흑자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흑자율 = 흑자액(소득-비소비지출-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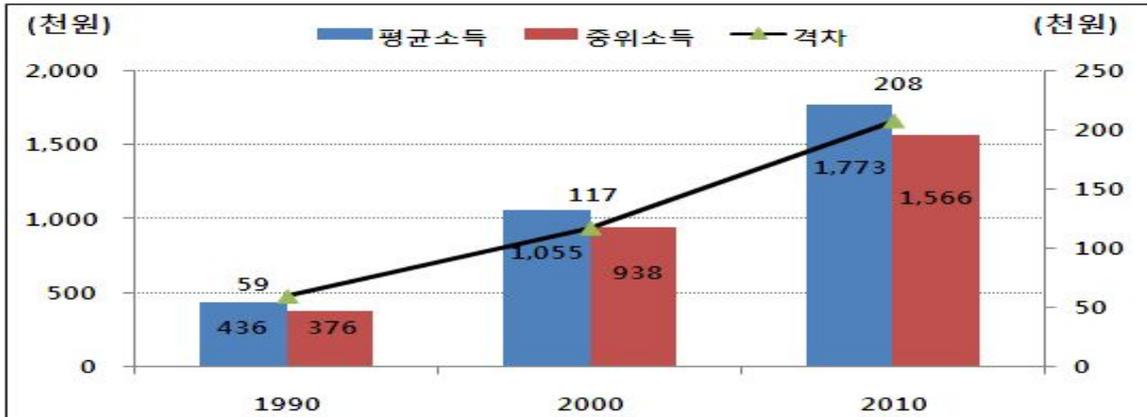
<별첨 4> 소득계층별 적자가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흑자액(=소득-비소비지출-소비지출)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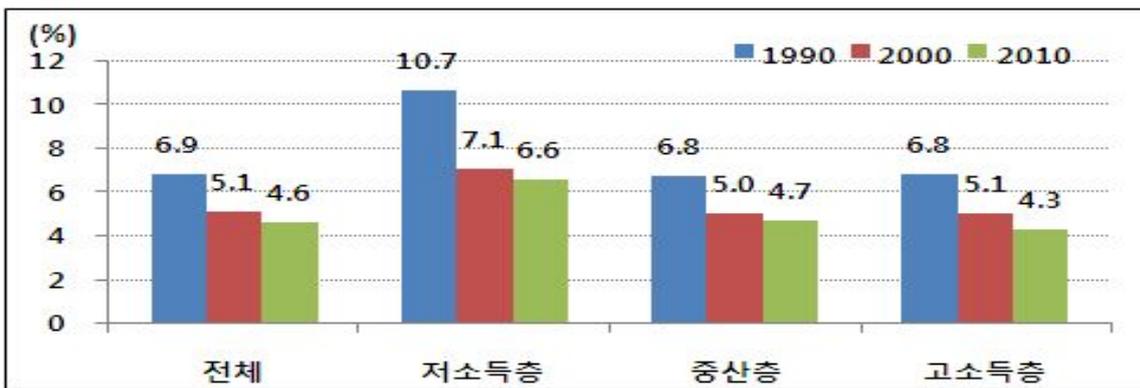
**<별첨 5>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가구원수 차이 반영.  
가처분 소득 = 경상소득 - 경상조세 - 연금 - 사회보장 - 사회적 현물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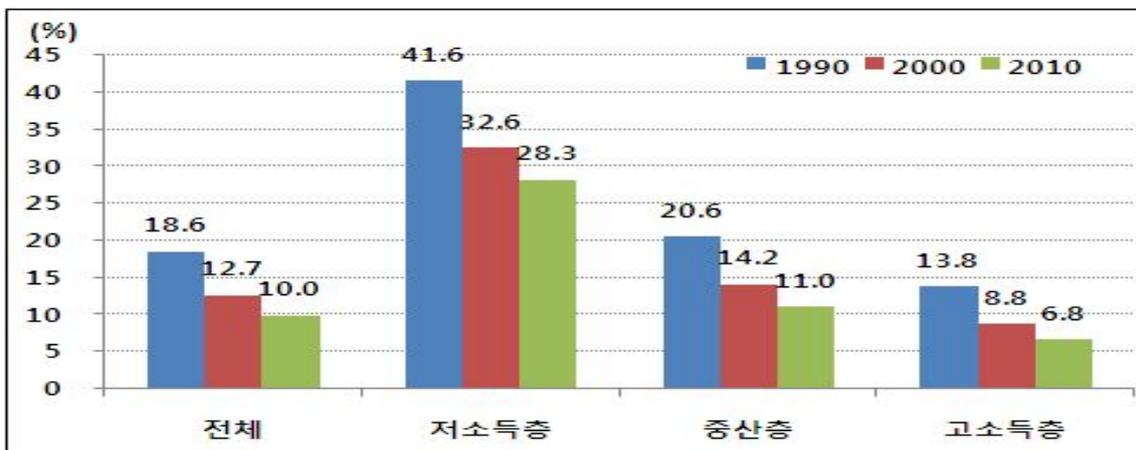
**<별첨 6> 의류/신발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별첨 7> 식료품비 지출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각년도

주: 도시(2인 이상, 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2.0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7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9일	9월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1.92	2.08	0.16%p
	엔/달러	92.93	88.43	81.19	77.52	76.69	-0.83¥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909	1.3751	-0.0158\$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0,992	11,433	441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738	8,669	-6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36	3.37	0.01%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77.3	1,116.4	39.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12.9	1,774.1	-38.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9일	9월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7.28	89.33	2.05\$
	Dubai	78.06	73.14	88.80	109.15	105.40	-3.75\$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4.24	332.60	-1.6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